

역사교과서 왜곡·시국 미사 발언 공방

정총리 '답변회피'에 민주당 의원들 집단 퇴장...여야 '중복논란' 가열

국회 국정부질문

국회의 2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정부질문에서는 역사 교과서 왜곡 논란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 발언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침략 등과 관련한 정총리 총리의 답변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본회의장을 한때 집단퇴장하면서 파행이 벌어졌다.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정 총리를 상대로 교회사 교과서가 일본의 '침략'을 '진출'로 기술한 점, 강화도조약 체결에 대해 "고종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체결됐다"고 서술한 점 등을 거론하며 "이런 기술이 우리 정체성에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은 교과서 교과서에 대해 "5·16 이후 유신 독재에 대한 심각한 미화가 있다"며 "유신체제라는 표현 자체가 없는 교과서"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교회사 외의) 다른 7종 교과서 집필진 53명의 이력을 분석해보니 68%가 전교조 출신·전국역사교사모임 출신이고 심지어 EBS에서 좌편향 발언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람도 있다"며 "집필진의 편향성을 놓고 보면 이 역시 지적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좌편향 교과서"라 불리는 7종 교과서는 이념성과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 총리는 도종환 의원이 "일본의 진출이나, 침략이나", "일제 강점기의 쌀 수출이나, 수탈이나", "일본의 조선 의병 소탕이나, 학살이나"라며 교과서 교과서의 기술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역사학자들이 판단할 문제" 등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일

본이 뺐은 총리", "천일 총리 물리나라"는 등으로 거세게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다. 결국, 오전 국정부질문은 이로 인해 조기 종료됐다가 오후에 재개됐다.

정 총리는 "질문 원고를 미리 받지 못해서 즉석에서 확인이 안 된 상황이라 답변을 못 드렸다"면서 "충실한 답변을 못 드려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침략한 것인가, 진출한 것인가"라고 묻자 "침략"이라고 답했고, "학살한 것인가, 소탕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학살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시국미사 발언 논란=새누리당 의원들이 일제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박창신 신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한 신부는 NLL이 대한민국 영토선이 아니고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 연평도 사건이 대한민국이 자초한 것이라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강길부 의원은 "다른 날도 아닌 연평도 도발 3주기를 하루 앞두고 나온 이 같은 발언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젊은 영령들과 지금도 북한의 도발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장병을 모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총리는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사제가 이전에 한 국민으로서 우리 장병이 파괴 지킨 NLL이나, 반인륜적인 주민대상 포격에 대해 복한을 옹호하고 찬양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종교계 인사들까지 중복으로 낙인찍고, 역사교과서 문제조차 친북·중복을 끌어들이는 비이성적 태도야말로 민주주의가 무너진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오전 국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정부질문에서 집단으로 퇴장하고 있다. 이날 국정부질문은 민주당 의원들이 교과서 역사 교과서의 편향성 논란을 둘러싼 정총리 국무총리의 답변태도에 반발해 집단 퇴장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연합뉴스

강창희 의장, 농성중 진보당 의원들에 "국회로 돌아오라"

강창희 국회의장과 이병석, 박병석 국회의장 등 국회의장단은 25일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반발하며 20일째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인 통합진보당 의원들을 만나 농성 중단을 권유했다.

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정부질문 시작 전 국회의장들과 함께 국회 본청 앞에 있는 단식농성장을 찾아 진보당 김선동 오병운 이상규 의원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 뒤 5분가량 머물며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강

의장은 "이제 그만하고 국회로 돌아오라. (진보당이 국민에게) 전할 이야기는 다 전했으니 국회에 들어와서 같이 이야기하자"며 농성 중단을 권유했다.

이에 진보당 의원들은 별다른 답변

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장은 또 단식 농성이 깊어지면서 진보당 의원 2명이 병원으로 실려간 것과 관련, "건강이 열려된다. 건강에 신경쓰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진보당 소속 의원 5명은 지난 6일 식발 후 단식농성을 시작했으며 20일과 21일에 김미희, 김재연 의원이 잇따라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

/연합뉴스

박지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MB 개입없이 일어날 수 없는 일"

"안 신당, 민주당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아"

민주당 박지원(사진) 전 원내대표는 25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없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은 일어날 수 없었다고 단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대선개입 의혹의 '몸통'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지낸 박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이나 국방부나 각 부처의 모든 주요한 사항은 일단 청와대와 조율을 하게 돼 있고, 특히 중요한 사안은 직접 대통령께 보고를 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뒷선이



개입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는 "그것은 검찰에서 할 몫"이라면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움직임과 관련, "과연 현재 알려진 분들을 가지고 얼마나 큰 파괴력이 있는 정당을 창당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

다"면서 "안 의원이 대통령을 하고 싶다면 큰 조직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념 등으로 볼 때 민주당에서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연대를 제안했다.

이어 그는 최근 논란이 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의 발언에 대해 "본질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그 본질은 버리고 사제단의 정치 개입 발언으로만 초점이 옮겨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선 불복이나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게 결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송호창 "창당, 역량따라 시기·조건 달라질 수 있다"

(안철수 의원 측)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송호창 의원은 25일 신당 창당 시기와 관련해 "우리의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춰지는지에 따라 여러 가지 시기나 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전원'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안 의원의 신당 창당 공식화 움직임과 관련, "내년 언제까지 창당을 해야하든

지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오는 28일 예정된 안 의원의 정치세력화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드는 데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공식화하는 자리"라고 말한 뒤 "이것이 신당 창당 공식화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그렇게 봐야 한다"고 인정했다.

송 의원은 "저희의 정치세력화는 기존 정당들이 하지 못한 것을 뛰어넘으며 해결해 나가자는 시도"라며 "기존 정당이 항상 배척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정치를 해왔다면 저희는 대화와 통합을 하면서 여야, 진보·보수 진영의 한계를 초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민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문형표 고발

민주당은 25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같이 전한 뒤, "문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개발협력기구(KAIST) 2009년 과 21일에 김미희, 김재연 의원이 잇따라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며 "문 후보자의 사적, 불법적 법인

카드 사용은 장관 자격 상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문 후보자 스스로 인사청문회 당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밝혀지면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더 이상 청와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퇴하는 길만이 국민에게 사죄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는 길"고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오늘부터 예산안 예비심사

국회는 26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간다.

국회 운영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환경노동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기재위 등이 이날 오전 일제히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부처별 예산안을 상정한다고 예정위 관계자가 25일 전했다. 나머지 상임위들도 27일 이후 곧바로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6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심사에 시동을 거는 것과 동시에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일제히 예비심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동구 수기동 | 회사 사정상 급매함

제일 오피스텔

문의. 010-3605-5000

<h3 style="margin: 0;">1층 상가. 25평</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 코너 · 현, 편의점 임대 중 (보 3천만원에 월 125만원) · 시세/ 분양가 - 2억 5천만원 · 급매가 - 1억 7500만원 	<h3 style="margin: 0;">10,12,13층 OP. 29평</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및 사무실 겸용 · 전망 좋음, 주차편리 · 시세/ 분양가 - 1억원 · 급매가 - 6500만원 	<h3 style="margin: 0;">9,13층 OP. 53평</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전용 · 전망 좋음, 코너 · 시세/ 분양가 - 2억원 · 급매가 - 1억 3500만원
---	---	---